

엠바고 꼭 지켜주십시오!

2014.12. 3.(수) 정오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
부탁드립니다.(조간용)



3년의 혁신,
30년의 성장



국민신문고
www.epeople.go.kr

보도자료



정부민원안내콜센터
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



국민권익위원회

고충처리·부패방지·행정심판·제도개선

(T) 02-360-2721 ~ 2728

(F) 02-360-3520

· 2014.12. 3(수) · 총 5 쪽

작성

청렴조사평가과

과 장 허재우 ☎ 02-360-6541

사무관 박은령 ☎ 02-360-6544

배포

홍보담당관실

과 장 박형준 ☎ 02-360-2721

'14년 공공기관 청렴도 7.78점, 전년 대비 소폭 하락

통계청, 경기도,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문별 청렴도 최고

< '14년 측정 개요 >

□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이성보)는 3일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.

청렴도는 외부·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.

※ 설문조사는 4개월('14.8월~11월)에 걸쳐 (주)한국리서치,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

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,819명으로,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,081명(외부청렴도), 소속직원 5만 6,701명(내부청렴도), 관련 학계, 시민단체, 지역민·학부모 등 2만 1,037명(정책고객평가¹⁾)이다.

1)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, 광역자치단체,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I·II 유형에만 적용

< 전반적인 청렴수준 >

-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.78점으로, 전년 대비 소폭(0.08점) 하락했다.(2013년도 7.86점)

외부·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,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설문결과를 보면,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▲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·청탁(8.95점→9.07점) 등 부패인식, ▲ 업무처리 기준·절차 공개(8.37점→8.44점) 등 투명성,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(8.23점→8.32점) 등 책임성은 개선되었으나,

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▲ 민원인의 금품·향응·편의 제공 경험률(0.7%→1.7%), ▲ 예산의 위법·부당한 집행(6.2%→7.7%) 및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(6.6%→6.8%)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을 살펴보면, 정원 2,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I 유형에서는 통계청이, 2,000명 미만인 II 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.²⁾

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, 시·군·구에서는 경기 오산시, 강원 인제군, 서울 강동구가,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되었다.

공직유관단체 정원 2,300명 이상인 I 유형에서는 한전 KPS, 1,000명 ~ 2,300명인 II 유형에서는 한국남부발전(주), 300명 ~

2) 금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분류에 규모(정원) 기준을 도입

- ▶ 중앙행정기관 : I 유형(2,000명 이상), II 유형(2,000명 미만)
- ▶ 공직유관단체 : I 유형(2,300명 이상), II 유형(1,000명 이상 2,300명 미만), III 유형(300명 이상 1,000명 미만), IV 유형(150명 이상 300명 미만), V 유형(150명 미만)

1,000명인 Ⅲ유형에서는 한국감정원, 150명 ~ 300명인 Ⅳ유형에서는 한국투자공사, 150명 미만인 Ⅴ유형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, 지방공사 중에서는 경기관광공사, 지방공단 중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, 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.

※ 청렴도점수 수준 비교표 참조(첨부 48페이지)

- 특히 금년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, 한국해운조합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월호 사건이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< 부패경험 관련 >

- (민원인 응답)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·향응·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.7%로 나타나 지난해(0.7%)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.

이는 금년도 과도한 강의료 제공 등 새로운 부패유형 설문 항목 도입 등 설문조사를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.

기관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부패 직접 경험률(3.4%) 및 간접 경험률(1.8%)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(기관 소속 직원 응답) 인사 관련 금품·향응·편의 제공률(0.5% → 0.4%)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, 예산의 위법·부당한 집행 경험률(6.2% → 7.7%),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(6.6% → 6.8%)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기관유형별로는 인사 관련 금품·향응·편의 제공 직접경험률(0.6%), 간접경험률(3.8%) 및 위법·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(8.6%)은 기초자치단체가,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(8.7%)은 교육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**(정책고객 응답)** 정책고객이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·향응·편의를 제공하였거나,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3.3%로, 전년(3.2%)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.

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(6.0%), 광역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(3.4%), 중앙행정기관(2.5%) 순으로 나타났다.

< 부패취약분야 및 항목 >

-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,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,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·감독, 기초자치단체는 인·허가,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전반적으로 부패경험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‘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’, ‘징계 및 처벌의 적정성’에 대한 내부직원 및 정책고객 평가가 전년에 비해 저조했다.

또한, 민원인이 평가하는 부패인식이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, 알선·청탁 등 부패인식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.

※ 세부수치는 첨부 12, 21페이지 참조

<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>

- 권익위는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, 감점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를 제고하였다.

(행정기관) 행정기관의 경우 금년에는 총 161개 기관 553건의 부패사건에 대해 10점 만점에 최대 0.7점, 평균 0.2점이 감점되었다.

부패유형은 금품수수(47.9%, 265건)가 가장 많고, 공금횡령·유용(18.8%, 104건), 향응수수(16.3%, 90건), 문서위·변조(7.2%, 40건), 직권남용(3.6%, 20건) 순으로 나타났다.

(공직유관단체)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총 79개 기관 총 128건의 부패사건에 대해 10점 만점에 최대 0.7점, 평균 0.3점이 감점되었다.

부패유형은 금품수수(39.8%, 51건), 공금횡령(18.8%, 24건)이 가장 많고, 채용 관련 직권남용이 10.2%를 차지했다.

< 신뢰도 저해행위 >

□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호의적 평가 유도 행위, 측정대상자 명부 오기·오염행위 등에 대해 감점을 하였다.

금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, 경남 거창군 등 조직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한 기관 등 총 423개 기관과 명부 오류행위를 한 27개 기관에 대해 감점처리를 하였다.

< 향후 추진 방향 >

□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**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,**

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·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.

또한 공공기관 대상 간담회·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.

첨부 :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